

# 북핵 위협과 한국 대비태세의 격차

## 원인 규명 : 오인식의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박 휘 락 (朴輝洛)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가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핵능력에 관한 오인식(misperception)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에 관하여 실제와 한국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하여 ‘전 한반도 공산화’와 같은 공세적 의도의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능력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실제 차이가 커서 오인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판단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오인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기만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북한의 진의를 바꾸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제언해야하고, 북한의 어떤 것을 조심해야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을 전문성 있게 평가 및 대응하는 조직을 창설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보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Key Words | 북핵, 북한 핵무기, 오인식, 북핵 위협, 핵전략

\* 국민대학교 부교수 겸 정치대학원장이다. 미국 국방대학교 석사(1999)와 경기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2009) 취득 후 북한핵, 국방개혁, 한미동맹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핵 위협과 안보』(북코리아, 2015) 등 북핵과 안보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기술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북협상전략의 내용과 방향: 북핵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2017), “South Korean Preparednes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 Few Steps Behind,”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7)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안보 특히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I. 서론

현재 북한의 비핵화 즉 정확하게 말하면 핵무기 폐기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치열한 노력이 전개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한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였고, 2018년 6월 12일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과 이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체결된 남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기로,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특히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를 어긴 채 기어코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목표달성 이전에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가안보는 만일의 사태까지도 대비하는 것이고, 상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면서도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한국이 채택해온 북핵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대비방향의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그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최악의 사태가 대두되더라도 취약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해왔으나 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여 선제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능력은 사전징후 파악을 위한 정보력이 미흡하고, 그것이 실패할 때 대응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는 하층방어용의 PAC-2(PAC-3로 개량 중) 8개 포대만 보유한 상태라서 전국을 방어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하며, 성주에 배치된 상층방어용 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도 남한의 일부분만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동일한 기간에 일본은 해상용 SM-3, 지상용 SM-3 요격미사일(예정), PAC-3

요격미사일로 전국을 2회(3회 예정) 방어할 수 있는 BMD를 구축하였다고 한다면 북핵 대비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가 미흡한 이유는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지만, 필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북한의 실제 핵능력을 한국이 오인식(誤認識, misperception)<sup>1)</sup>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전 한반도 공산화’를 포함한 공세적 사용보다는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수세적인 이유에 치중하여 인식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도 실제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 가설이 타당하다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폴 미북정상회담’도 오인식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의 대남적화전락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보는 언제든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한 상태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북핵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북핵 폐기가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국제관계 특히 전쟁에 관한 오인식의 작용에 관해서는 냉전시대에 서양에서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었다.<sup>2)</sup> 냉전의 상황이라서 서로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함에 따라 오인식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대치로 지금도 냉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에 소통이 원활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오인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의 국제관계 연구에서는 아직 ‘misperception’에 대한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오인식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었다. 오인식의 존재나 영향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도

1) ‘오인’으로 번역할 경우 A를 B로 잘못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고, ‘오해’의 경우에는 misunderstanding이 보편적인 상대영어이다. 오인식을 번역한 다른 학자의 예는, 윤민우, “위기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오인식과 거짓말의 문제와 위기협상 역량강화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2호 (2015), pp. 309-334.

2) 이에 대해서는 저비스가 시초이고, 저비스 및 다른 학자들의 후속연구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6); Robert Jervis, “War and Mispercept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Spring 1988); Arthur A. Stein, “When Misperception Matters,” *World Politics*, Vol. 34, No. 4 (1982); Jack S. Levy, “isperception and the Causes of War: Theoretical Linkages and Analytical Problems,” *World Politics*, Vol. 36, No. 1 (Oct, 1983); Charles A. Euelfer and Stephen Benedict Dyson, “Chronic Misperception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1 (Summer 2011).

내켜하지 않을 일이고, 인식 또는 오인식은 인간의 생각에 관한 사항이라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관하여 오인식이 존재한다면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나 대응태세 강구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이 심각해져서 위협과 대응태세 간에 격차가 커질수록 오인식 여부를 분석하여 교정해야할 필요성도 커진다. 한번의 연구를 통하여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상당한 근거라도 제공할 수 있고, 이후의 추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오인식에 관한 이론을 북핵과 연관하여 재정리 및 소개하고, 제3과 제4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오인식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의도와 능력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이해와 대응전략의 수립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오인식의 실제적인 영향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 II.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 오인식의 개념과 영향

오인식의 기본적 의미는 현실과 다른 이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오인식은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환경과 실제 세상이 운영되어가는 환경 간의 불일치”<sup>3)</sup>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세상 간의 격차”로 설명된다.<sup>4)</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객관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바, 자신의 인식들에 부합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기억하고, 반대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배척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실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sup>5)</sup> 일상 생활에서는 이러한 실수들은 사소하여 거의 주목받지 않지만, 어떤 의미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특정인이 해당 사건이나 현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가

3) J. Levy, *op. cit.*, p. 79.

4) C. Euelfer and S. Dyson, *op. cit.*, p. 75.

5) 윤민우, *op. cit.*, pp. 316-318.

평가되고, 현실과 그것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오인식에 의한 실수라고 진단하게 된다.

어떤 사람도 특정 사안에 관하여 가용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사람마다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양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인식 중에서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나서 사건이나 현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오인식으로 판정된다. 개인의 경우에 이러한 오인식은 개인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데 국한되지만, 정책결정자의 경우는 국가 대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1962년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하는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가 정책을 토의 및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한 엘리스(Graham T. Allison)은 대부분의 정부가 내리는 결정 중 10% 정도만 합리성에 근거한 정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을 정도로 정부의 결정도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이 사실이다.<sup>6)</sup> 정책결정자는 개인적 인식틀이나 이미지라는 필터를 통하여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잘못 선택하거나,<sup>7)</sup> 불확실한 지식과 애매한 정보에 근거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8)</sup>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학자는 오인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sup>9)</sup>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 오인식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결정하였다고 하여 결과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자가 결정의 내밀한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의 의도와 같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 오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인식의 개입 여부와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은 의사결정의 합리성 강화에 매우 중요하고, 그에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 2. 국가안보에서의 오인식

전쟁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다른 국가의 의도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은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고자 하고, 따라서 정확한

6)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p. 267.

7) C. Euelfer and S. Dyson, *op. cit.*, p. 78.

8) R. Jervis, *op. cit.*, p. 5.

9) *Ibid.*, p. 3.

내용이 파악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오인식이 발생할 개연성은 높아진다. 다만, 전쟁이 종료되고 나면 그러한 오인식의 존재와 일부분이 파악되게 된다. 실제로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포함하여 20세기에 들어서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발하였지만 그 근원에는 오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10)</sup> 스토싱어(John G. Stoessinger)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10개의 주요 전쟁을 분석한 후 발발요인 중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를 선택하라면 오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1)</sup>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의 의도와 능력에 관한 오인식으로 인하여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이 크다.<sup>12)</sup> 당연히 오인식만이 전쟁 발발의 요인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sup>13)</sup> 전쟁 나아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오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오인식은 전쟁발발이나 전쟁수행은 물론 평시에 상대방의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대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억제와 대비에는 위협의 식별이 근본적인 출발점인데, 위협은 적의 의도와 능력을 식별하는 것이고, 당연히 적은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확하지 않는 적의 의도와 능력에 근거하여 적의 위협을 식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억제태세나 대비태세도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전쟁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평시의 전쟁억제와 대비는 진행 중인 가운데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애매하겠지만, 오인식을 발견하여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있는 경우가 억제 및 대비태세의 합리성 강화에 유리할 것이다. 다만, 제니스(Irving L. Janis)가 다수의 오인식이 잘못된 결정에 이르는 현상을 “집단사고”(Groupthink)로 명명하면서도 그것이 평시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듯이,<sup>14)</sup> 평시의 어떤 결정에 관하여 오인식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분석된 전쟁에 관한 오인식의 대상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오인식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경우였지만, 현실에서는 오인식으로 인하여

10) A. Stein, *op. cit.*, p. 505.

11)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Boston: Wadsworth, 2011), p. 402.

12) *Ibid.*, pp. 402-411.

13) A. Stein, *op. cit.*, pp. 525-526.

14) Irving L. Janis,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Second ed. (Boston: Yale Univ. Press, 1982).

해야 할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전 영국과 프랑스의 소위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이다. 영국의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수상은 히틀러와 뮌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시대의 평화를 보장하였다고 자랑하였지만 이들은 평화에 취하여 전쟁대비를 소홀하였고, 그 결과로 1년 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 또 1년 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침공할 때 11일만에 독일군이 영불해협까지 진출하도록 만들 정도로 참패를 당하였다.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침략 의도와 능력을 오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군사력 균형이 유리한 2년 전에 전쟁을 각오 하였거나 2년 동안 철저하게 대비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거나 피해가 적은 상태에서 더욱 조기에 전쟁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sup>15)</sup>

이러한 점에서 스타인(*Arthur Stein*)은 상대방이 단호하게 나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협력을 추구하는 ‘상호주의 국가’(*reciprocator*)와 상대방이 단호하게 나오면 협력하고,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단호하게 나가는 ‘기회주의 국가’(*opportunist*)로 양분하면서 기회주의 국가는 상대국이 협력적일 것이라고 오인식함에 따라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협력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도 영국이 협력적일 것(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독일이 오인식함에 따라 발발하였고, 1950년의 한국전쟁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오인식함에 따라 발발한 것이며, 1962년 쿠바사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련이 오인식한 결과라는 것이다.<sup>16)</sup> 기회주의 국가에게 전쟁을 불사한다는 단호함을 보여줄 때 그 기회주의 국가는 협력적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것이 쿠바사태에서 소련이 물러선 이유라는 주장이다.<sup>17)</sup> 즉 평시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도발을 해도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오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적의 위협에 대비하고, 실제보다 적을 다소 과도하게 평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여유(*safety margin*)를 두어 만전을 기하게 된다. 적을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대비할 경우 다소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상대방과의 군비경쟁을 겪을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15) R. Jervis, *op. cit.*, p. 683.

16) A. Stein, *op. cit.*, pp. 509-512.

17) *Ibid.*, p. 514.

과소평가하였다가 기습적 공격을 허용하여 국가의 존망이 어려워지는 상황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 3. 국가안보에 관한 오인식의 범주

국가안보에 관한 오인식에는 자신과 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도(intention)와 능력(capabilities)에 관한 오인식이다. 이 요소들은 적이 나를 평가하든 내가 적을 평가하든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따라서 적에 관한 오인식의 대부분은 이 능력이나 의도의 오인식과 관련되어 있다.<sup>18)</sup>

적의 의도에 관한 오인식은 적을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보거나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을 말하는데, 적의 의도 자체가 추상적이라서 확정하기가 어렵거니와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어떤 연유로든 적의 의도에 관한 오인식이 발생하면 적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대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국가들은 적의 공격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착오가 전쟁으로 유도할 수 있다.”<sup>19)</sup> 이 중에서 적을 호의적으로 인식하여 대비하지 않을 경우는 국가를 패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의 적대적 의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sup>20)</sup> ‘안전여유’라는 말로 이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적의 능력에 관해서는 군인이나 무기의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에 비하여 오인식이 발생할 소지는 적다. 다만, 적의 능력에 전문성, 군기, 사기 등의 무형적인 요소와 유사시 군사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 전쟁잠재력까지 포함한다면 오인식의 여지는 높아진다. 또한 첨단이거나 결정적인 무기 및 장비일 경우 적이 철저하게 은닉할 것이라서 파악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오인식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적의 능력 평가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고, 적의 능력을 왜곡되게 평가하는 심리적이거나 제도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쟁에서 우연의 요소가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능력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sup>21)</sup>

---

18) J. Levy, *op. cit.*, p. 80.

19) R. Jervis, *op. cit.*, p. 686.

20) *Ibid.*, p. 688.

21) J. Levy, *op. cit.*, p. 96.



적의 의도와 능력에 관한 오인식은 적의 전략에 대한 오인식으로 연결된다. 미군들이 “전략(Strategic) = 목표(Ends) + 방법(Way) + 수단(Means)”라고 설명하고 있듯이,<sup>22)</sup> 적의 전략은 의도에 해당하는 ‘방법’과 능력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적의 의도나 능력에 대한 오인식은 적의 전략에 대한 오인식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응전략은 당연히 잘못되게 된다. 우리가 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구비하고 있느냐 여부는 적의 전략에 대한 오인식의 여부에 직접적으로 좌우되고, 적의 전략에 대한 오인식은 적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인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적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미흡하다는 것은 적의 전략에 대한 오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적의 의도나 능력 중 하나 또는 둘에 관하여 오인식이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 III.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관한 인식 평가

#### 1. 한국의 실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대체적으로 한미 연합전략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6.25전쟁 시 시도했던 전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려는 공세적 목적,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방어와 김씨 가문 정권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세적 목적,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한 협상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수세적 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40% 정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체제안전보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획득하거나 미국을 압박하거나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22) Arthru F. Lykke, Jr.,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Army War College, 2001), p. 179;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lanning*, JP 5-0 (Washington D.C.: JCS, June 16, 2017), p. I-1.

있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50% 정도의 국민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였음에도 그러한 의견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국방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였음에도 문항 자체에 한국을 공격한다든가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sup>23)</sup>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다수의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대부분의 정부 정책결정자들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공세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다가 퇴임 후 2004년 10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24)</sup>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시 국제문제협의회(CCGA: Coordinating Committee on Graduate Affairs)에서의 연설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sup>25)</sup> 보수성향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비핵개방 3000”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구상하거나 북핵 대비태세를 절박하게 강화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전 대통령들과 크게 다른 심각성으로 북핵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7년 9월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세적 의도로 인식함을 드러내었다.<sup>26)</sup> 비록 행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고, 공개된 것과 진심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공세적 목적보다는 수세나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2018년 3월 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방문 후 발표한 합의문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핵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수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무력 위협을 통해 미국 등 국가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 정권 및 체제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의도,<sup>27)</sup> 또는 국내 정치 안정과 대외적인 정권보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23)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p. 18.

24) 김지영, “국민이 개핵 안따르면 정부는 기다려줘야,” 『경향신문』, 2004. 10. 7, p. 4.

25) 『조선일보』, 2004. 1. 15, p. A3.

26) 『조선일보』, 2017. 9. 15, p. A3.

27) 정성운,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KINU 연구총서 17-20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77.

있기 때문이다.<sup>28)</sup> 나아가 일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관하여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이라는 설명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 한다”는 설명이다.<sup>29)</sup>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학자는 매우 드문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30)</sup>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한국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라도 배치하여 핵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토론이 한국에서 벌어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여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하였으며, 2017년 9월 중순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10월 하순에는 홍준표 당대표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인들에게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 2. 북한의 실제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 이외에는 실제로 어떤 동기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북한이 1990년대 초반 공산권이 붕괴되었거나 경제난으로 체제가 불안해져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분명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1965년부터 가동하여 핵분열 실험을 실시하였다.<sup>31)</sup> 1986년 자체 기술로 5MWe 원자로를 완성하였고, 이후부터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다양한 기폭장치 실험을 추진하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5년 대규모 홍수가 겹치면서 한국에서 북한의 소위 “급변사태”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한국에서는 그 연장선 상에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핵무기를

28) 홍석훈·나용우,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7권, 3호 (2017), p. 110; 정성운, *op. cit.*, p. 49.

29) 홍석훈·나용우, *Ibid.*, p. 108; 정성운, *Ibid.*, p. 49.

30) 박휘락,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제60권, 4호 (2017), p. 43.

31) 구본화,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통일연구원, 2015), p. 3.

개발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룩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데, 김일성이 지시하였다면 분명히 90년대 이전에 핵무기 개발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미국 때문에 실패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체제가 불안해지면서 수세적인 목적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의도는 6.25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변경한 적이 없다.<sup>32)</sup>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당=국가=군대의 일체성이 매우 높고, 클라우제비츠(Carl on Clausewitz)의 말처럼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당연히 핵무기도 남한의 혁명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봐야 한다.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120만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부대들을 전진배치시켜 두고 있는 북한이 대량살상을 초래한다고 하여 핵무기만을 사용 목록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부터 “조국통일대전”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이 평화적 방법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정의의 통일대전을 통해 조국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3)</sup>

### 3. 분석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는지를 한국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의도와 실제 의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나 북한의 대남적화전락을 고려할 때 체제안전이라는 수세적인 목적으로만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나중에 체제안전의 의도가 결합되었고, 최근에 그것이 강화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공세적인 목적과 수세적인 목적이

32)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 213; 김강녕,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 (2015), p. 4.

33) 정성운, *op. cit.*, pp. 108-109.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상대의 의도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전쟁을 대비할 때는 적의 의도를 가급적이면 공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방심하다가 기습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의 의도보다는 적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만 주목하여 대비한다. 의도는 금방 바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평화적인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120만 정도의 대규모 군대가 존재하는 한 6.25전쟁의 재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임에도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주변국의 침략에 대한 방어계획까지 수립 해두는 것은 주변국의 침략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침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수세적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관행에도 부합되지 않고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악의 사태까지 대비하고자 노력해야 할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수세적으로만 인식한다면, 외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수세적으로 인식하면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순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M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하여 81.2%가 위협적이라고 응답(매우 위협적이라는 응답도 53.5%)하였다.<sup>34)</sup>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한국 국민들의 89.3%가 북한 핵무기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다가 다소 둔감해지면서 2015년에는 84.0%, 2016년 79.5%, 2017년 70.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70%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하고 있다.<sup>35)</sup> 만약 북한이 체제안전과 같은 수세적인 목적이라면 이와 같이 높은 비율의 국민들이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도에 다소의 오인식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의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오인식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이의 분석에도 또다른 한편의 논문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해보면, 국민들의 경우에는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북한을 경시하는 마음, 국방을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함에 따른 타성, 평화지향의 정권에 의한

34) 구경근, “[MBC 여론조사] ‘81.2% 북핵 위협적’ 핵무장론 우세,” 『MBC』, 2016. 9. 14,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16757\\_19842.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16757_19842.html) (검색일: 2018. 4. 11).

3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85-86.

지속적인 남북 화해협력 주장과 사례 누적, 북핵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으로 보기가 어려운데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한길리서치’가 28~29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8.4%가 ‘잘 됐다’고 평가했고, MBC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29-30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77.5% 나오는 등 화해협력 정권의 주장이 국민들의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결정자들이 북핵 개발의 의도를 공세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 대두된 남북 화해협력의 철학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당시에 적용되었고, 이후의 보수정권이 남북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시각을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반동으로 북핵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황은 거의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미북대화를 주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강력한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사로잡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IV.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인식 평가

### 1. 한국의 실태

북한의 핵능력 평가는 주로 군대에서 담당하는 사항인데, 한국군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기 이전보다 개발한 이후에 더욱 애매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발표한 한국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였지만,<sup>36)</sup>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관한 언급은 없이 북한이 “플루토늄 50여 kg”을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만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7)</sup> 또한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군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문서 중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 여부와 현재까지 개발한 핵무기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서는 없다.

36) 국방부, 『1999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9), p. 45.

37)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 27.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한국의 평가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다. 2015년 중국의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6년에는 20개를 더 만들만큼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sup>38)</sup> 미국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하였다.<sup>39)</sup> 소련의 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으로 대량의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한국군에서는 북한이 언제부터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다. 비록 정부에서 비밀문서를 통하여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 덜 절박하게 평가해온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2. 북한의 실제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여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하였고, 스스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상태이다.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북한은 20-2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sup>40)</sup> 북한은 2020년경 최대 88개의 원자탄과 최대 46개의 수소탄, 즉 합계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sup>41)</sup> 소련의 전문가도 최근 북한이 30-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7-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42)</sup>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최근 들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북한은 2017년 “화성-12형”과 “화성-14형”을 수차례 시험발사하여 성공한 다음,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부양(浮揚) 궤도(lofted trajectory)로 발사하여 고도 4,475km, 비행거리 950km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최소에너지 궤도(minimum

38) *Wall Street Journal*, (April 24-26, 2015), p. 1.

39)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Imagery Brief*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une 14, 2016), p. 1.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Pu\\_HEU\\_and\\_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Pu_HEU_and_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 (검색일: 2016. 8. 23).

40) Michael J. Zagarek, Jr., “Hypothetical Nuclear Attack on Seoul and Tokyo: The Human Cos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Events in and around North Korea* (October 4, 2017), p. 1.

41) 정성운, *op. cit.*, pp. 57-58.

42) 유철중, “러 핵전문가 ‘북한 30~35개 핵탄두 보유…연 7개 생산 능력,’” 『연합뉴스』, 2018. 6. 11.

trajectory)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만 3,000km에 이르러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sup>43)</sup> 북한은 보복의 확실성이 큰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 4월 2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서를 통하여 “림계전 핵시험과 지하 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면서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이 과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평가하고 있는 바와 매우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3. 분석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능력에 관하여 안전여유까지 고려하여 최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핵무기 보유 숫자를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북한의 핵능력을 절박하게 파악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으며,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하였을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한국의 의도적인 과소평가 경향은 2017년 9월 3일 실시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한국 정부는 그 위력을 50kt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120kt, 일본 160kt의 평가에 비하면 매우 작고, 한국의 전문가도 200kt까지 추정하였다.<sup>44)</sup> 미국의 전문가는 250kt까지 확대하여 평가하였는데,<sup>45)</sup> 당시 폭발력이 핵실험장을 사용불가능하게 만들어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sup>46)</sup>

북한이 핵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느냐는

43) 『조선일보』, 2017. 11. 30, p. A1.

44) 송호근, “수소폭탄 태풍 앞 ‘빈손’ 한국은 왜 이리 차분한가,” 『중앙일보』, 2017. 9. 14, p. 30.

45) Zagurek, “Hypothetical Nuclear Attack on Seoul and Tokyo: The Human Cos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38 North, p. 1, <http://www.38north.org/2017/10/mzagurek100417/> (검색일: 2017. 12. 4).

46) 안승섭, “홍콩 신문 ‘중국 연구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 추정,’” 『연합뉴스』, 2018. 4. 25.



여부도 한국은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한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탑재 중량이 1톤 정도라서 핵무기의 소형화 소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써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500kg 정도로 소형화해야하는 미국 공격용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탑재를 위한 소형화와는 기준이 다른데도 『2016 국방백서』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정짓지 않고 있다.<sup>47)</sup> 또한 북한이 2017년 5월 21일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라서 5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고,<sup>48)</sup> 2017년 2월 8일 군사퍼레이드에서 북한은 또 다른 고체연료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과시함으로써<sup>49)</sup> 한국이 추진해온 ‘킬 체인’의 유용성이 위협받게 되었지만 이 부분에는 주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통일이 되거나 객관적 기관에 의한 사찰이 선행되지 않고는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국 및 국내의 전문가 평가에 비해서 한국군의 위협 인식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군대에서 정확하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있지만, 국방부의 발표에 의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V.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평가와 대응전략

전략은 의도와 능력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 중 어느 것 하나에 오인식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핵전략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 또는 보유의 의도나 능력에 오인식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1. 한국의 실태

47) 국방부(2016), *op. cit.*, p. 27.

48) 『조선일보』, 2017. 5. 22, p. A6.

49) Michael Elleman, “North Korea’s Army Day Military Parade: One New Missile System Unveiled,” *38th North* (February 8, 2018), p. 1.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체제안전 등을 위한 수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 즉 북한의 핵전략에 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는 수년 동안 동일하게 북한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으로써 핵무기 개발로 인한 변화를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가 2018년 1월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서 공개된 것을 보면, “튼튼한 국방태세”라는 항목에서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에 이어서 3번째로 “북핵·WMD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서 핵무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다. 학계에서도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일부의 민간인 학자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였고,<sup>50)</sup> 일부 군출신 연구자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연구한 바가 있으나, 연구의 양이 많지는 않았다.<sup>51)</sup>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수세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절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한국은 어떤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핵문제가 본격적 위협으로 대두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10년 동안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중요시하는 정권이 국정을 수행한 사실과 관련이 없지 않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국과 탄도미사일방어(BMD) 협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설정하면서 북핵에 관해서는 언급 자체를 삼가는 경향을 보였고,<sup>52)</sup>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미사일 요격용 PAC-3 대신에 항공기 요격용 PAC-2를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보수성향의 정부들은 나름대로 북핵 대응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절박성은 여전히 높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수립하면서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공격용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800km로 증대시키고,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 레이더 확보, PAC-2를 PAC-3로 개량, 미사일작전통제소를 설치할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50)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 5-36;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pp. 121-144.

51)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국방정책연구』, 104권, 0호 (2014), pp. 155-196; 최정민, “북한 핵 억제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군사논단』, 제77호 (2014년 봄), pp. 11-40.

52) 이상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주변국 인식,” 『군사논단』, 통권, 제46호 (2006), pp. 153-154.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다. 박근혜 정부 또한 ‘킬 체인’이라는 명칭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F-35 40대를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3축 체계’라는 명칭으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응징보복을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 노력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3축 체계’의 구축 속도가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북핵 대비태세는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각차에 의하여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전략을 심각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지만, 한국은 북핵 대비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하여 핵보유국의 상태에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결정했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목표라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시작된 것처럼 평화무드로 전환해 가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논의하면서도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강화보다 장군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봉급 인상 등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53)</sup>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의 활용전략에 관한 관심과 대응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2. 북한의 실제

북한의 핵전략은 최고의 기밀로 분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론을 적용하면 전혀 추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핵전략은 그다지 복잡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방향을 보면 그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핵전략을 지향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전략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으로 구분하여 수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우선 대(對)미국 핵전략으로서 북한은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strategy)을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나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서, 상대방을 초토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53) 김민석, “실종된 국방개혁 2.0 … 북한 비핵화 늪에 빠졌다,” 『중앙일보』, 2018. 5. 18, p. 26.

결정적인 한 두 개의 표적은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sup>54)</sup> 이렇게 되면 미국은 본토의 몇 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하여 핵응징정보복을 가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개발에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최소억제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함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회담을 결정하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ICBM에 근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핵무장과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을 연계해온 것도 최소억제전략만 가지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5)</sup>

다만, 북한은 아직 ICBM의 개발에 완전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라서 인도나 파키스탄이 채택하고 있는 “신뢰적 최소억제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 strategy)을 구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56)</sup> 이것은 핵무기의 적극적 사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최소억제로서의 전력부족을 보완한다는 개념으로서, 미북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이 섬뜩한 용어를 사용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직접 낭독한 신년사에서는 “미국본토전략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2018년 6월 12일의 미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고, 합의서까지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대한 별도의 핵전략을 수립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위협과 잠재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통하여 남한을 통일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sup>57)</sup> 핵무기 위협을 통한 북한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한국의 어느 도시에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을 극심한 혼란과 공황상태에 빠뜨린 후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석권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7일 만에 남한은 점령한다는 소위 “7일 전쟁” 계획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sup>58)</sup> 2018년

54) Tom Sauer,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p. 9.

55)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을 제안하며,” pp. 322-323.

56) 박휘락, *op. cit.*, p. 43.

57) *Ibid.*, p. 44.

58)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 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4호 (2016), p. 98.

8월 25일에 서해에서 훈련을 참관한 후에는 “인민군대에서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있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불안해질수록 북한의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sup>59)</sup>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평시에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기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sup>60)</sup> 핵보유국은 비핵국가에 비해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고,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공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sup>61)</sup> 북한은 처음에는 남한에 대하여 사소한 사항을 요구하다가 한국이 수용해줄수록 요구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한국 내에서 핵전쟁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커질 경우 한국 정부의 대안은 제한될 것이며, 반대로 북한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sup>62)</sup> 북한의 김정은이 강조하듯이 핵무기는 그들에게 “만능의 보검”인 셈이다.

### 3. 분석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의도를 수세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략에 관하여 심층 깊은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대에서 보듯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의 자체적인 북핵대비가 쉽지 않은 점도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있으면서도 2-3종의 BMD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북핵대비태세가 훨씬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군대의 단일한 인식도 작용하였다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ICBM을 비롯하여 수세적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핵능력을 개발해왔음에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전략”을 구현한 후 한국에 대한 “위협과 잠재적 사용”을 시도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즉 오인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

59) 홍우택, *op. cit.*, pp. 109-110.

60)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2014), p. 193.

61) 우평균,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2016), p. 197.

62) *Ibid.*, p. 206.

제대로 대응하려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최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함으로서 초래되는 국제적 고립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현재 상태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무시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개발에 착수하여 성공하기 전까지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확장억제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일부에서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든 상관없이, 그리고 핵능력은 안전 여유까지 감안하여 최대치로 평가한 후, 북한의 핵전략을 판단해보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국방의 기초적인 접근방식이다. 국방은 요행을 바라거나 대비 가능한 상황만 선택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황 특히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핵전략 추정이나 우리의 북핵 대응전략 수립 노력이 미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공세적으로 보지 않고자 하거나 북한의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오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국방에서는 적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도한 대비가 문제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과소평가가 우려되는 특이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셈이다.

## VI. 결론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비하여 한국의 대비태세가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등에 관하여 오인식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관해서는 공세적 사용 가능성을 거의 무시함으로써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능력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실제 차이가 커서 오인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판단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다.

한국의 북핵 대비태세가 미흡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대부분 수세적으로만 인식한 오인식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진정한 의도는 북한이 밝히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확신할 수 없지만, 1950년 6.25전쟁 때 달성하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북한의 대남전략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상황이 변화하면서 원래의 의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해석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상대방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비태세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고,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수세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으로 인식한 것은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북핵 대비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절박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미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공식문서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여부나 핵무기의 보유량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2018년 9월 3일 북한이 성공한 수소폭탄의 위력에 대하여 한국이 추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나 전문가에 비해서 1/3-1/5에 불과하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여부도 미국 공격용 ICBM 기준으로 언급함으로써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으나, 국방부의 발표에 의존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북한의 핵능력을 낮게 오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오인식과 북한 핵능력에 대한 오인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이다.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대입해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최소억제전략” 한국에 대해서는 “위협과 잠재적 사용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려는 노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 북핵을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미국이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4D’개념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수세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낮게 평가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이 중국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기만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북한의 진의를 바꾸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하고, 북한의 어떤 것을 조심해야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을 전문성 있게 평가 및 대응하는 조직을 창설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협조하지 않을수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능력, 전략을 더욱 냉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오인식의 여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지식인들도 선입관에서 벗어나 북핵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도 하여금 소망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당연히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의로 접근하다가 마지막에 낭패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 이전에 선조들이 적에 대하여 판단했던 바를 분석해보면 적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전쟁들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선조들은 적이 침략할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고, 적의 능력을 약하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로 인하여 적의 전략을 예상하거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침략을 당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현 인식도 미래의 세대들이 과거 선조들이 가졌던 오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핵무기는 워낙 치명적인 무기라서 실수할 경우 국가의 패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오인식을 경계하는 가운데 현실에 가장 적합하도록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분학. 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2016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국방부. 1999. 『1999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_\_\_\_\_. 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_\_\_\_\_. 2018. “2018년 업무보고서.” 2018 업무보고자료.  
[http://www.mnd.go.kr/mtbhome/mtb/plan/subview.jsp?id=plan\\_010101000000](http://www.mnd.go.kr/mtbhome/mtb/plan/subview.jsp?id=plan_010101000000)(검색일 2018. 3. 15).
- 권태영 외. 2014.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 김강녕. 2015.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
- 김성철. 2014.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 김진하. 2017.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을 제안하며.”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 김태현. 2016.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 박창권. 2014.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104권. 0호.
- 박휘락. 2014.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의정논총』. 제9권. 1호.
- \_\_\_\_\_. 2017a.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제60권 4호.
- \_\_\_\_\_. 2017b. “오인식(誤認識)이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구축에 미친 영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24권. 2호.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8.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 우평균. 2016.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 윤민우. 2015. “위기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오인식과 거짓말의 문제와 위기협상 역량강화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2호.
- 이윤식. 2013.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 정성윤. 2017.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KINU 연구총서 17-20. 서울: 통일연구원.
- 최정민. 2014. “북한 핵 억제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군사논단』. 제77호.
- 홍석훈·나용우. 2017.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7권. 3호.
- 홍우택. 2016.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 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4호.

- Albright, David and Kelleher-Vergantini, Serena. 2016.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Imagery Brief*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une 14).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Pu\\_HEU\\_and\\_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Pu_HEU_and_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검색일: 2018. 3. 25).
- Allison, Graham T.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Department of Defense. 2015.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 Elleman, Michael. 2018. “North Korea's Army Day Military Parade: One New Missile System Unveiled.” *38th North* (February 8).
- Euelfer, Charles A. and Dyson, Stephen Benedict. 2011. “Chronic Misperception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1.
- Janis, Irving L. 1982.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Second ed. Boston: Yale Univ. Press.
- Jervis, Robert. 1976.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_\_\_\_\_. 1988. “War and Mispercept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 Joint Chiefs of Staff. 2017. *Joint Planning. JP 5-0*. Washington D.C.: JCS (June 16).
- Klingner, Bruce. 2011.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s* (Heritage Foundation).

- Levy, Jack S. 1983. "Misperception and the Causes of War: Theoretical Linkages and Analytical Problems." *World Politics*. Vol. 36. No. 1.
- Lykke, Arthru F. Jr. 2001.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Army War College.
- Sauer, Tom. 2011.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 Stein, Arthur A. 1982. "When Misperception Matters." *World Politics*. Vol. 34. No. 4.
- Stoessinger, John G. 2011.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 Boston: Wadsworth.
- Zagurek, Michael J. Jr. 2017. "Hypothetical Nuclear Attack on Seoul and Tokyo: The Human Cos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Events in and around North Korea* (October 4).

## **Causes for the Gap between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Nuclear Preparedness : the Role of Misperception**

PARK, Hwee Rhak |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a main cause of the gap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nuclear preparedness is misperception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and its nuclear capabilities. It introduces theories of misperception and compares reality and South Korean 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capabilities, and strategy for its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South Korean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because South Korea excludes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has offensive goals such a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nuclear weapons. A review of the lower assess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in official documents also reveals that South Korea has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s a result, South Korea has made little effort to know and evaluat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South Korea should try to perceive North Korea's real intentions and capabilities as its tri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based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018 and the agreement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It must reduce misperceptions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whether North Korea will denuclearize or deceive South Korea and the US. It should also be confident about what it can offer to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to assess and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correct perceptions with the help of media and opinion leaders, who will deliver more fact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b>Key Words</b>   North Korea Nuclear, North Korea, Misperception, North Korea Nuclear Threat, Nuclear Strategy
--

논문투고일: 2018.4.21. / 심사의뢰일: 2018.4.24. / 게재확정일: 2018.6.14.